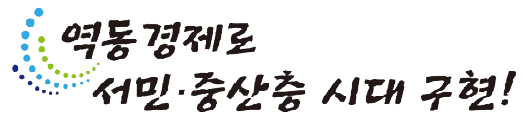


경제관계장관회의

24-13-1

(공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Ⅱ]

2024. 7. 10.

관 계 부 처 합 동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Ⅱ) [요약]

1 추진배경

-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 창출 및 기업의 투자·경영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등을 지속 개선할 필요
 - 1차 대책*에 이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바탕으로 2차 대책 마련
 - * '24.3.13일, 「제1차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
- ⇒ 향후에도 분기별로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속도감있게 개선

2 분야별 주요내용

◇ 신산업 지원 및 현장 애로·규제 해소를 위한 20건의 개선안 마련

1. 신산업 지원

① 자율주행·AI

-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허가기간(현행 5년)을 최대 9년까지 확대*
 - *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차량(현재 총 440대 중 70대)에도 연장 신청 허용
- AI 학습용 영상, 사진 등 비정형데이터 활용이 많은 보건·의료 분야에는 중소병원, 스타트업 대상 가명정보 처리기술·절차자문* 지원
 - *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솔루션 지원, 의료데이터 가명처리시 법·제도 자문 등

② 친환경 신기술

- 폐플라스틱 열분해* 관련 원활한 투자이행**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 관리체계 마련
 - * 무산소에서 폐플라스틱에 열을 가하여 오일 등으로 분해하는 화학적 재활용 기법
 - ** S사(울산미포) 1.83조원, L사(충남당진) 0.15조원
-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를 PET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하여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합리화
 - * 연간 1만톤 이상 페트 수지 생산자는 3%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해 생산할 의무
 - ** EU·영국 등 주요국은 최종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과

- 수소 신기술 R&D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에 대한 인허가·검사 간소화*

* 판매용 수소용품 인허가·검사(최대 6개월 소요)와는 별도 간이관리체계 마련 추진

- 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예: 전기→열)하는 신기술 개발 및 설비 보급 지원*

* 히트펌프시스템 개발 등 섹터커플링 R&D 실증사업 및 전력수요자원 활용 추진

2. 현장규제 개선

① 투자·경영애로

-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광고물 설치·관리 기준 개선 및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조기에 추가 지정* 추진

* 1기(코엑스, '16년) → 2기(코엑스+명동·광화문광장·해운대, '23년) → 3기('26년 추진)

- 최근 경영난을 반영한 법인택시 면허기준대수* 완화 방안 마련

* 현재 (서울·부산) 50대, (광역시·시) 30대, (군) 10대 미보유시 사업면허 취소

- 일선 사업장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안전 문제가 적은 경미한 건축물 해체공사는 허가·신고를 면제

* (현행) 건축물의 모든 해체공사에 대해 허가·신고제 운영(2~3개월 소요) → (개선)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해체 등 3가지 공사에 대해 허가·신고 면제

② 중소/소상공인 애로

- ICT 스타트업의 R&D 지원을 위해 정부 R&D 공모 참여요건* 완화

* 예 : 창업 초기 수익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 자본전액잠식 기업에도 공모 기회 부여 추진

- 영사 교육 수료자에도 영화관 상영 업무 허용('26~'27년 한시)

* 영사 교육프로그램 개발('25.上) → 수료자 상영업무 허용('26~'27년) → 제도화 검토

-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 반영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E-9) 사업장 배정기준 개선 추진

* 현행 :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신청인원이 많을수록 후순위 가능 개선(안) 예시 : 신규 고용신청 인원수는 점수 계산시 未고려

별첨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일람표

구 분		과 제 명	일정	본문
신산업 (8건)	자율주행 · AI (3건)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최대기간 연장	'24.4Q	2
		▶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 제작과정 개선 및 데이터 공개 확대	'24.12.	2
		▶ 가명처리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원활한 획득 지원	'24.下	3
	친환경 신기술 (5건)	▶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한 별도 관리체계 마련	'24.下	4
		▶ 폐플라스틱 재활용 의무 대상 합리화	'24.7.	4
		▶ 연구·개발용 수소용품 제작시 인허가·검사 간소화	'25년	5
		▶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관리설비 개발·보급 지원	'25년	5
		▶ 첨단업종에 수전해 장치 제조업 추가	'25.上	6
현장 규제 (12건)	투자· 경영 애로 (6건)	▶ 옥외 디지털 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규제 완화	'26년	7
		▶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25년	7
		▶ 경미한 건축물 해체공사 3종의 허가·신고 면제	'24.3Q	8
		▶ 공업화주택(모듈러주택) 관련 규제 특례 확대	'24.下	8
		▶ SW제품 특성을 반영토록 혁신제품 신청제도 개선	'24.7.	9
		▶ 습식사료의 유통용 보관방법 추가 인정	'24.下	9
	중소/ 소상공인 애로 (6건)	▶ ICT 분야 창업초기 기업의 정부 R&D 참여요건 완화	'24.12.	10
		▶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24.下	10
		▶ 신규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	'24.4Q	10
		▶ 선량한 숙박업주 보호를 위한 면책조항 마련	'24.下	11
		▶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경력요건 완화	'25.3.	11
		▶ 소상공인 스마트기기 보급 지원사업의 현장체감도 제고	'24.12.	12

순 서

I . 추진 배경	1
II . 분야별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2
1. 신산업 지원	2
1. 자율주행 · AI	2
2. 친환경 신기술	4
2. 현장규제 개선	7
1. 투자 · 경영 애로	7
2. 중소/소상공인 애로	10
III .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13
※ [참고] 과제별 부처 담당자	15

I. 추진 배경

□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은 역동경제의 출발점

- 기업·시장 중심의 혁신을 통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수적
 - 신기술·신산업 창출 및 기업의 투자·경영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혁신생태계 조성 필요
- 그간 정부는 신산업 활성화, 기업투자 촉진 등을 위한 규제 혁신·현장애로 해소에 정책적 역량 집중
 - * 신성장 4.0 전략 마련('22.12월), 283건의 경제규제 개선('22.7월~현재) 등
 - '24년에도 분기별로 신산업 및 현장 애로·규제를 속도감있게 개선하여 미래 먹거리 육성 및 성장동력 확보 추진
 - * 제1차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3월 既 발표(비상경제장관회의)

□ 현장소통을 통해 20건의 개선방안 마련, 향후 지속 발굴·개선

-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 건의 및 중기 익스프레스,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 수렴
 - ⇒ 20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 그림자 규제* 제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등 기업 환경 전반의 규제품질 개선에도 노력
 - * 유권해석, 불명확한 규제 등으로 인해 규제 대상, 적용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
 - ** 신기술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별도 관리체계 마련 등

	신산업 지원		현장규제 개선	
분야	자율주행·AI	친환경 신기술	투자·경영 애로	중소/소상공인 애로
과제수	3건	5건	6건	6건
대표 과제	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최대기간 연장 (5년→최대 9년)	페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한 별도 관리체계 마련	옥외 디지털 영상광고물 설치 규제 완화	ICT 분야 스타트업의 정부 R&D 참여요건 완화
건의 내용	계속적인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연장 필요	페플라스틱 열분해는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중 → 인허가 등 규제 부담	옥외 디지털광고물에 엄격한 이용·관리 규제가 적용되어 업계 애로	창업 초기기업은 자본잠식 발생이 쉬움 → 정부 R&D의 재무적 참여요건 완화 필요

II. 분야별 규제혁신 및 현장어로 해소 방안

1 신산업 지원

1. 자율주행 · AI (3건)

- ①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9년까지 확대(최초 5년 + 2년 + 2년)* 하고,

* 안전성 검증을 거쳐 추가 연장하되, 여객자동차 내구연한(버스, 일반승용차 9년) 등 고려
-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연장 신청 허용

[조치계획]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4.4분기)

- ▶ (규제현황)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은 최대 5년으로, 허가기간 만료 시 연장·갱신 불가* → 허가기간 도래 차량 증가
* 허가기간 만료로 총 440대 중 70대 시험·연구용 활용 불가('24.6월 기준)
- ▶ (해외사례) (美) 최초 2년, 이후 2년씩 연장, (日) 최초 6개월, 이후 6개월씩 연장
- ▶ (기대효과) 시험·연구용으로 활용 가능한 자율주행차 증가로 R&D 활성화

현장건의

계속적인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만료예정인 자율주행차의 허가기간 연장 필요

- ② 자율주행용 필수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민간 활용 편의 제고

- 자율주행차용 정밀도로지도의 품질향상을 위해 제작과정을 개선* 하고, 2·3차원 도로지도를 모두 민간에 개방, 온라인 순차 제공**

* 지도 정밀검수용 SW 개발 적용, 도로 내 촬영정확도 향상을 참조점 설치 등

** 정밀도로지도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온라인 제공 개시 → 온라인 제공범위 순차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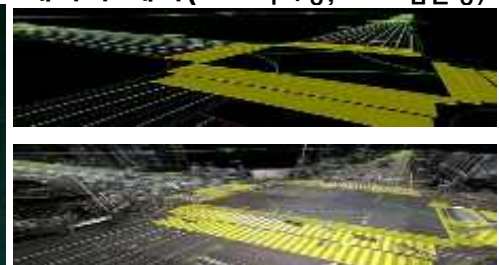
-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공공의 정밀도로지도를 연계·통합하는 관리 플랫폼 마련*

* 53개 기관이 참여 중인 자율주행 민관 협의체 「자율주행 디지털 맵 포럼」 활용

※ (참고) 자율주행과 정밀도로지도와의 관계



데이터 예시(2차원 벡터형, 3차원 점군형)



[조치계획] ① (국토부)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체계 및 검사SW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 정밀도로지도 제작공정 개선방안 마련('25.1분기)

② (국토부) 3차원 도로지도 공개 원칙으로 전환('24.5월 既조치),

공개데이터 순차적 온라인 제공 서비스 개시('24.12월)

③ (국토부)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현 계획 수립('25년)

▶ (애로요인) ①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한 도로 촬영 및 데이터 검수·보완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공정 정밀성 및 효율성 저하

② 3차원 정밀도로지도는 보안성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공유되고, 기관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자료공유 허용

③ 기관(공공/민간)간 공간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 부재

▶ (기대효과) 정밀도로지도 제작공정 단축 및 공간정보 이용 효율성 증대

현장건의

정부가 정밀도로지도 제작공정을 최적화하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3차원 공간정보까지 개방한다면 민간 기업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

③ 공공 부문 비정형데이터의 민간 제공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대상 가명정보 처리 교육과정* 신설·운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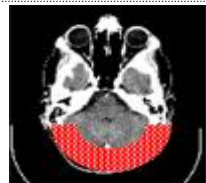
*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기획 과정(온라인) 및 찾아가는 현장교육 과정(오프라인) 신설

- AI 학습용 영상, 사진 등 비정형데이터 활용이 많은 보건·의료 분야에는 중소병원, 스타트업 대상 가명정보 처리기술·절차자문* 지원

*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솔루션 지원, 의료데이터 가명처리시 법·제도 자문 등

※ (참고) 의료데이터 가명정보처리 예시 : CT 사진을 활용한 얼굴 골절진단 AI 기술개발

(가명처리 전) → (가명처리 후)



■ (특이사항) 개인당 여러 장의 사진이 있을 경우 3차원 재건 기술을 통해 개인의 얼굴 형상 복원 가능

■ (가명처리 방안) 목적 달성과 무관한 뇌 뒷부분(후두부)만 마스킹 처리하여 활용

[조치계획] (개보위) 가명정보 처리 교육과정 신설·운영('24.下) 및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처리기술·절차자문 지원('25년)

▶ (애로요인) 업계의 AI 학습용 데이터 수요 증가 추세로, 올해 초 마련된 비정형데이터 가명정보 처리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적극적 정보제공 필요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24.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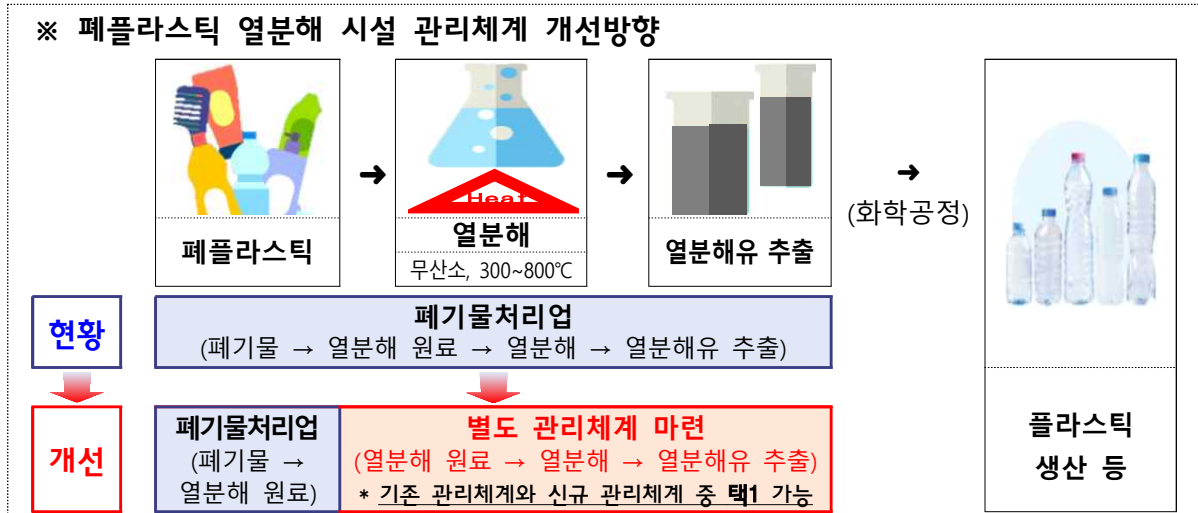
▶ (기대효과) 의료, 미디어, 교통 등 비정형데이터 활용 부문의 AI 비즈니스 혁신 촉진

현장건의

가명정보 처리 기준의 현장 적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영상, 사진 등 비정형 데이터의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

2. 친환경 신기술 (5건)

- ①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대한 원활한 투자이행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



[조치계획] (환경부)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한 별도 관리체계(안) 마련('24. 下)

- ▶ (규제현황) 폐플라스틱 열분해과정이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시설 허가의 어려움 및 투자·외자 유치에 장애, 주민의 부정적 인식 등 우려
- ▶ (기대효과)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대한 원활한 투자이행 지원
 - * S사(울산미포, 1.83조원), L사(충남당진, 0.15조) 등이 열분해 시설에 대규모 투자 중

현장건의 폐플라스틱 열분해과정이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인허가 등 각종 제약

- ②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및 기업부담 합리화를 위해 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PET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



[조치계획] (환경부) PET병 재생원료 사용 시범사업('24.7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활용 지정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25년)

- ▶ **(규제현황)** PET 재활용 의무*는 PET 수지 생산자에만 부과하고, PET 수지 수요자인 PET병 생산자에는 미부과 → 재활용 PET의 판매·유통량이 저조하여 재활용 의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고, PET 수지 생산기업 부담 가중

* 年 1만톤 이상 PET 생산자는 3%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할 의무
↳ ('25년) 10% → ('30년) 30%로 확대 계획

- ▶ **(해외사례)** EU, 영국 등 주요국은 최종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 부과
- ▶ **(기대효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및 기업의 재활용 PET 생산·재고 부담 완화

현장건의 재활용 PET는 가격이 약 40% 비싸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들이 구매를 꺼리는 상황, 향후 재생원료 의무 비중 확대 감안 시 일방적 기업 부담 과중

③ 판매 용도가 아닌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수전해설비, 수소추출 설비 등)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인허가·검사 간소화*

* 세부 방안은 연내 구체화(연구·개발용 시제품 대상 별도 간이관리체계 마련)

[조치계획] (산업부) 제도 비교분석(연구용역)을 거쳐 「수소법」 관련법령 개정('25년)

- ▶ **(규제현황)** 수소용품* 제작시 연구·개발용 시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용과 동일한 인허가·검사 체계 적용 → 대학·연구소의 연구개발 애로**

*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수소법 제2조 8호, 시행규칙 제2조 3항)

** 인허가·검사 소요기간 : 1~6개월 / 제조사업 허가 실적 : 약 35개소('24.6월 기준)

- ▶ **(기대효과)** 신기술 R&D 활성화를 통한 수소 제품·설비 개발 촉진

현장건의 대학·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위한 수소 시제품 제작시에도 상용 제품 판매 사업자와 같이 사전 허가검사를 받도록 운영되고 있어 연구 진척에 애로

④ 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 개발 및 설비 보급 지원*

* 히트펌프시스템(전기→열) 등 섹터커플링 기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해 저장·활용하는 기술) R&D 실증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에너지 변환 신기술을 적용한 설비에 대해서는 전기공급이 많은 시간대 수급 불균형에 대응하는 수요자원(플러스DR)* 활용 추진

* 잉여전력 발생시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할인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 (참고) 전력-열에너지 섹터커플링 구조 예시



전력 초과 공급 상황

전력-열변환 구조 예시

[조치계획] (산업부) 섹터커플링 기술 실증 R&D 추진(~25년) 및 전력 수요자원 등록('26년)

- ▶ (애로요인) 재생에너지는 기상여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커 공급 초과시 송·배전망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상황 발생
→ 향후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할수록 발전사업자 부담 증가 우려
-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전체 발전량의 약 1/5에 달하는 제주도의 경우 '15~'23년간 총 446회 출력제어 발생
- ▶ (기대효과)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로 안정적 전력 공급 및 新 비즈니스 창출

현장건의 등유 등 화석연료를 난방 에너지로 사용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남는 전기를 온수로 변환하는 설비 보급 지원 필요

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 허용(타당성 검증 후) 추진**

* 전기를 이용해 물(H_2O)을 분해하여 수소(H_2)를 생산하는 장치 제조업

** 전문가 검토(연구용역, 연내 완료)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조치계획] (산업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25.上)

- ▶ (규제현황) 산업집적법상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 내 제조시설 설치가 허용되나, 수전해 장치 제조업은 첨단업종에 미포함
- * 예 : 메모리용 전자회로 제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디스플레이),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바이오) 등 총 85개 업종(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표5)
- ▶ (기대효과) 규제 완화로 수소 산업 제조설비 투자 확대 기대

현장건의 산업집적법상 '첨단업종'에 수소용품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사업영역을 확장해 수전해 생산사업 추진시 애로

2

현장규제 개선

1. 투자·경영 애로 [6건]

① 디지털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활용의 신속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공간,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설치·관리 기준 개선('25년)

-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조기 추가 지정*

* 1기(코엑스, '16년) → 2기(코엑스+명동·광화문광장·해운대, '23년) → 3기('26년 추진)

※ (참고) 디지털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예시



[조치계획] (행안부) ① '디지털 옥외광고물 규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24.下) → 디지털 옥외광고물 설치·관리 기준 마련('25년), ②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3기 지정('26년)

- ▶ (규제현황) 현행 법령은 비전자적 광고물 설치·관리기준을 중심으로 규정중으로 (예: 표시면적 단일기준(벽면 225m² 이하) 적용), 디지털 광고물 게시가 제한적이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추가 지정에는 장기간 소요
 - ▶ (기대효과) 디지털 광고물 산업 활성화, 현대적 도시미관 구축('한국판 타임스퀘어')
- * 글로벌 디지털 광고물 시장 전망(억불) : ('26) 314, ('28) 365, ('30) 425 <프레스이던스리서치>

현장건의

디지털 옥외광고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제로 신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활용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한계

②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및 종사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방안 마련

* (서울·부산) 50대, (광역시·시) 30대, (군) 10대 미보유시 사업면허 취소

[조치계획] (국토부) '법인택시 면허제도 운영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24.6월~)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25년)

- ▶ **(규제현황)** 법인택시 사업자는 **차량 최저보유 수 유지 의무** → 종사자 감소로 인한 유헴 차량 증가로 기준 충족이 어려운 상황
- ▶ **(기대효과)** 법인택시 업계 애로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택시 수급 생태계 구축

현장건의 실적 부진 등으로 일부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더라도 면허기준 대수에 상응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도록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 영위가 어려움

③ 노후 건축물의 개·보수 및 스마트화 등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3종의 해체공사*는 허가·신고 면제

- * 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해체,
- ②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해체,
- ③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해체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5·8·9호>

[조치계획]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24.3분기)

- ▶ **(규제현황)** 구조 안전에 문제 없는 경미한 해체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해 2~3개월간 심의가 수반되는 허가·신고제* 운영중
- * 원칙 : 허가제(심의 의무) / 주요구조부(바닥, 기둥 등) 미해체 등 : 신고제(필요시 심의)
- ▶ **(기대효과)** 노후 건물 신속 개·보수 및 스마트화 전환으로 생산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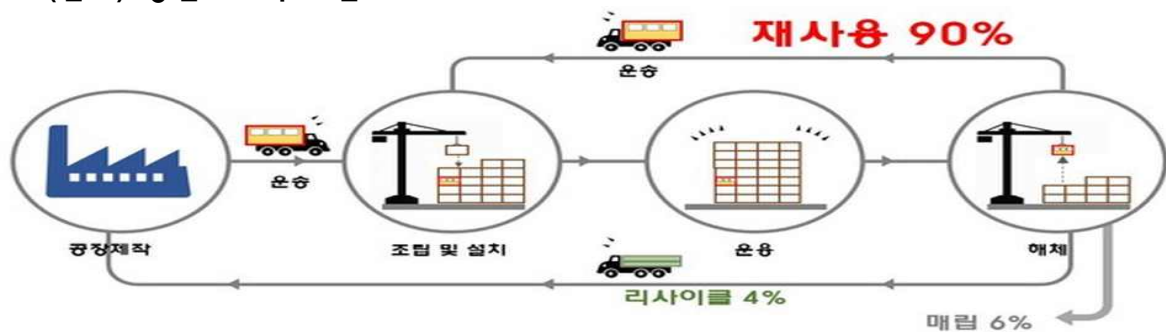
현장건의 경미한 부분 해체공사 시에도(예 : 30m² 미만의 바닥 슬래브 해체) 허가를 요구하여 노후 창고시설 스마트화 등 시설투자가 지연, 운영상 애로

④ 공업화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례대상을 단독·공동주택에서 ①준주택까지 확대하고, ②용적률·높이제한 완화 등 특례 추가 추진

* 공장에서 건축 골조 등을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양식으로, 공사기간이 짧고, 분진 및 폐기물 등이 적게 발생하여 관련 시장 성장세

** 국내 모듈러 시장규모(억원) : ('19)370, ('21)1,457, ('23)2,500, ('30^{예측})20,000 <철강협회>

※ (참고) 공업화주택 개념도



[조치계획] (국토부) 「주택법」 개정 추진('24.下)

- ▶ **(규제현황)** 친환경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높은 공사비용으로 인해 현행 수준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한계
 - * (특례 수준) 건축사에 의한 설계·감리 면제, 감리자 배치 면제, 설계기준 면제 등 (적용 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 **(기대효과)** 국내 공업화주택 업계 활성화, 친환경 주택 보급 확대

현장건의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폐기물 감소, 에너지 절감 등 장점이 있어 진흥될 필요가 있으나, 특례 대상 및 내용이 협소하여 산업 활성화에 제약

⑤ 물품(HW) 중심의 혁신제품(조달) 지정절차 개선을 위해 SW용 제품규격서 추가 및 실태조사서 보완(SW제품 대상 생산현장 사진 생략 등)

※ (참고) 혁신제품 지정제도

- * ①중앙행정기관의 R&D 결과물, ②상용화 전 시제품, ③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으로, 시범구매 등 조달특례 적용

[조치계획]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완료·시행('24.7.1.~)

- ▶ **(애로요인)** 혁신제품(조달) 지정 신청시 SW제품(예: 불면증치료 앱 등)에도 일반 제조물품과 같이 공정·생산시설 사진 첨부이 요구되어 신청에 어려움
- ▶ **(기대효과)** 혁신제품 신청 편의성 제고로 디지털 의료기기 등 SW시장 활성화

현장건의 혁신제품 신청 과정이 제조업 물품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디지털 의료기기 등 SW 제품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애로

⑥ 습식 사료의 유통 경제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 타당성, 위해성 등 여부 검토 후 신규 공법을 적용한 보관방법 추가 인정 추진

[조치계획] (농식품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0의2] 개정 추진('24.下)

- ▶ **(규제현황)** 수분함량 60%를 초과하는 습식사료는 유통을 위한 보관방법 한정 (통·병조림 밀봉 후 살균 등) → 새로운 안전 보관기술 개발시에도 (예 : 통·병조림 가열·살균 후 밀봉) 유통 현장 신속 적용이 제한
- ▶ **(기대효과)** 최신 보관공법의 신속 상업화 지원, 습식사료 유통방식 효율화

현장건의 다수 업체가 식용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안전성이 검증된 최신공법의 경우에도 열거된 유통용 보관방법에 해당되지 않아 시중 유통 불가

2. 중소/소상공인 애로 (6건)

① 창업 초기기업의 R&D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ICT 분야 R&D 공모제한 요건 완화* 방안 마련

* 예 : 창업 초기 수익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 자본전액잠식 기업에도 공모 기회 부여 추진

[조치계획] (과기정통부) 창업 초기기업 ICT분야 R&D 지원요건 완화방안 마련('24.12월)

- ▶ **(규제현황)** ICT 분야 창업 초기기업은 자본전액잠식 등 재무 상황에 따라 정부 R&D 과제 공모가 일부 제한*되어 폭넓은 참여 한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기정통부 고시)
- ▶ **(기대효과)** ICT 스타트업의 정부 R&D 참여 확대를 통해 기업 성장 촉진

현장건의 창업 초기기업은 수익 창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자본잠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서는 R&D 지원 제한요건 완화 필요

②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26~'27년 한시운영)하고*, 운영경과에 따라 제도화 등 검토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영사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25.上) → 교육 수료자는 상영업무 시범 수행 가능('26~'27년)

[조치계획] ① (문체부) 「영화비디오법」 개정 추진('24.下)

② (문체부) 영화관 영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25.上) 및 교육 이수('25.下)

- ▶ **(규제현황)** 영화관 내 영화 상영은 관련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만 가능
- ▶ **(기대효과)** 지역 영화관의 영화상영인력 수급 원활화 등 영화관 인력부담 완화

현장건의 현행법은 필름 영화를 영사기로 상영하던 시기에 마련된 조항. 영화 상영이 모두 디지털로 전환(90년대 중반)된 이후 필름 영사 기술이 불필요한데도 해당 국가 기술자격을 요구하여 영화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가중

③ 중소·영세 업체 외국인력 구인여건 개선을 위해 업체 간 외국인력 배정순위를 정하는 점수제의 항목 구성 및 배점 등* 개선 추진

* (검토안 예시) 신규 고용신청 인원수 항목 폐지 등

[조치계획] (고용부) 「신규 외국인력 배정 및 업무처리 요령」 개정('24.4분기)

- ▶ **(규제현황)**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구인실적, 고용신청 인원수 등에서 높은 종합 점수*를 받은 업체(사업장)부터 순차 배정

* (평가기준) ¹외국인력 배정인원 대비 실제 고용 비율 및 ²신규 고용신청인원이 적을수록, ³내국인 구인실적 및 ⁴재고용 만료자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 ▶ **(기대효과)** 사업장 간 외국인력의 합리적 배정으로 중소기업 사업장 인력난 완화

현장건의

평가항목이 기업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내국인들이 기피하는(지방소재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

④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상 행정처분(영업정지^{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청소년 보호법}) 면책조항 마련

[조치계획] ①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추진('24.下)

② **(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개정 추진('24.下)

- ▶ **(규제현황)** 숙박업소 내 청소년 이성혼숙 적발시 업주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받으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에 따른 면책조항이 부재

- ▶ **(기대효과)** 숙박업주 경영상 불확실성 완화, 선의의 피해자 구제

현장건의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 사용에 대한 숙박업주 면책을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

⑤ 경력은 짧지만 유망한 인력이 다수인 정보보호산업의 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시 경력요건을 완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제도 평가지표(경력요건) 개정 추진

※ (참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주요혜택

	금융/세제	인력	R&D	판로/수출	기타
주요 혜택	수도권 취득세 중과세 면제 등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등	R&D 지원사업 선정 가점 등	방송광고 최대 70% 할인 등	특허출원 우선심사

[조치계획] **(중기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 평가지표 중 경력요건 개정('25.3월)

- ▶ **(애로요인)**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 평가 시 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인력의 경력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정보보호업계 참여 애로

* 현행 : ㉠ 10년이상 ㉡ 8년~10년 ㉢ 6년~8년 ㉣ 4년~6년 ㉤ 4년 미만 점수 차등

- ▶ **(기대효과)** 정보보호업계의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참여 확대

현장건의 정보보호업체는 업계 인적 특성상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획득 어려움

⑥ 스마트상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기기 도입 후 후속 컨설팅을 지원하고, 既 수혜 업체 대상 로봇기술 도입 등 고도화 프로그램 신설

- 스마트기기 간 데이터 연동 기능을 보유한 업종별 우수 기술패키지 보급

※ (참고)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내용('24년)



유형	지원 내용
일반형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사이니지 3종 → 공급가의 50% 보조(최대 5백만원)
	3종을 제외한 스마트 기술 → 공급가의 70% 보조(최대 5백만원)
미래형	로봇기술(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또는 배리어프리 기술 1개 이상 도입시 → 공급가의 70% 보조(최대 1천만원)

- [조치계획]** ① **(중기부)** 스마트상점 수혜 소상공인 대상 사후 컨설팅 개시('24.12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내 고도화 트랙 신설('25.4월)
- ② **(중기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업종별 우수 기술 패키지 발굴·선정 및 보급('24.12월)

- ▶ **(애로요인)** 기술도입 후 후속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스마트기기 고도화 애로, 스마트기기 간 개별적 운영으로 데이터 연동 등에 한계
- ▶ **(기대효과)** 스마트상점의 효율적인 매장 운영 및 판매 촉진

현장건의 · 스마트기술 도입 후 고도화 필요하나, 중복 수혜 문제로 정부 지원 제한
· 스마트기기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운영 효율성 저하

Ⅲ.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1

신산업 지원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 자율주행·AI (3건)		
①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최대기간 연장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국토부	~'24.4Q.
②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 제작과정 개선 및 데이터 공개 확대		
• 정밀도로지도 제작공정 개선방안 마련 * 「정밀도로지도 데이터체계 및 검사SW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	국토부	~'25.1Q
• 공개데이터 순차적 온라인 제공 서비스 개시	국토부	'24.12.~
• 정밀도로지도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현 계획 수립	국토부	~'25년
③ 가명처리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원활한 획득 지원		
• 가명정보 처리 교육과정 신설·운영	개보위	'24.下
•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처리기술·절차자문 지원	개보위	'25년
◇ 친환경 신기술 (5건)		
①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한 별도 관리체계 마련		
•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한 별도 관리체계(안) 마련	환경부	'24.下
② 폐플라스틱 재활용 의무 대상 합리화		
• PET병 재생원료 사용 시범사업	환경부	'24.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활용 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	환경부	'25년
③ 연구·개발용 수소용품 제작시 인허가·검사 간소화		
• 제도 비교분석(연구용역) 후 「수소법」 관련법령 개정	산업부	'25년
④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관리설비 개발·보급 지원		
• 섹터커플링 기술 실증 R&D	산업부	~'25년
• 전력 수요자원 등록	산업부	'26년
⑤ 첨단업종에 수전해 장치 제조업 추가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산업부	'25.上

2

현장규제 개선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 투자·경영 애로 (6건)			
① 옥외 디지털 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규제 완화			
• '디지털 옥외광고물 규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행안부	'24.下	
• 디지털 옥외광고물 설치·관리 기준 마련	행안부	'25년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3기 지정	행안부	'26년	
②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 '법인택시 면허제도 운영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국토부	'24.6.~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	국토부	'25년	
③ 경미한 건축물 해체공사 3종의 허가·신고 면제			
• 「건축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토부	'24.3Q	
④ 공업화주택(모듈러주택) 관련 규제 특례 확대			
• 「주택법」 개정 추진	국토부	'24.下	
⑤ SW제품 특성을 반영토록 혁신제품 신청제도 개선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완료·시행	조달청	'24.7.	
⑥ 습식사료의 유통용 보관방법 추가 인정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0의2] 개정 추진	농식품부	'24.下	
◇ 중소/소상공인 애로 (6건)			
① ICT 분야 창업초기 기업의 정부 R&D 참여요건 완화			
• 창업 초기기업 ICT분야 R&D 지원요건 완화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24.12.	
②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 「영화비디오법」 개정 추진	문체부	'24.下	
• 영화관 영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이수	문체부	'25년	
③ 신규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			
• 「신규 외국인력 배정 및 업무처리 요령」 개정	고용부	'24.4Q	
④ 선량한 숙박업주 보호를 위한 면책조항 마련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추진	복지부	'24.下	
• 「청소년 보호법」 개정 추진	여가부	'24.下	
⑤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경력요건 완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 평가지표 중 경력요건 개정	중기부	'25.3.	
⑥ 소상공인 스마트기기 보급 지원사업의 현장체감도 제고			
• 스마트상점 수혜 소상공인 대상 사후 컨설팅 개시	중기부	'24.12.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내 고도화 트랙 신설	중기부	'25.4.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업종별 우수 기술 패키지 발굴·선정 및 보급	중기부	'24.12.	

참 고

과제별 부처 담당자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당자
신산업 지원				
1-1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최대기간 연장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	박진호 과장 044-201-3847	김영주 사무관 jubae2000@korea.kr
1-2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 제작과정 개선 및 데이터 공개 확대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김형수 과장 031-210-2791	김통일 사무관 2tong@korea.kr
1-3	가명처리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원활한 획득 지원	개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	태현수 과장 02-2100-3071	이명진 서기관 lmj777@korea.kr
2-1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한 별도 관리체계 마련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박찬용 과장 044-201-7400	문유상 사무관 adt4773@korea.kr
2-2	폐플라스틱 재활용 의무 대상 합리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이정미 과장 044-201-7380	김형준 사무관 khj@korea.kr
2-3	연구·개발용 수소용품 제작시 인허가검사 간소화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044-203-3980	김동필 사무관 ktp0117@korea.kr
2-4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관리설비 개발·보급 지원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박상희 과장 044-203-3920	장원 사무관 itsme12@korea.kr
2-5	첨단업종에 수전해 장치 제조업 추가	산업부 입지총괄과	김종우 과장 044-203-4480	안근영 사무관 mrdotan@korea.kr 이제훈 주무관 leejue9304@motie.go.kr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당자
현장규제 개선				
1-1	옥외 디지털 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규제 완화	행안부 주소생활공간과	박광섭 과장 044-205-3551	권순관 사무관 orient05@korea.kr
1-2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이주열 과장 044-201-3823	서윤원 사무관 yunwon9317@korea.kr
1-3	경미한 건축물 해체공사 3종의 허가·신고 면제	국토부 건축안전과	문석준 과장 044-201-4987	유태종 사무관 agr@korea.kr
1-4	공업화주택(모듈러주택) 관련 규제 특례 확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 044-201-3364	이광우 사무관 yucamir@korea.kr
1-5	SW제품 특성을 반영토록 혁신제품 신청제도 개선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	김성환 과장 070-4056-7305	배철규 사무관 bae79@korea.kr
1-6	습식사료의 유통용 보관방법 추가 인정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서준한 과장 044-201-2351	김은옥 사무관 kimeunok@korea.kr
2-1	ICT 분야 창업초기 기업의 정부 R&D 참여요건 완화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이주식 과장 044-202-6230	최문석 사무관 moonseok@korea.kr
2-2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김지희 과장 044-203-2431	이초룡 사무관 leecr@korea.kr
2-3	신규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오기환 담당관 khoh7070@korea.kr	김경은 사무관 eunkk33@korea.kr
2-4	선량한 숙박업주 보호를 위한 면책조항 마련	복지부 건강정책과	곽순헌 과장 044-202-2810	김은희 사무관 silver@korea.kr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장현경 과장 02-2100-6291	임수연 사무관 arras@korea.kr
2-5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경력요건 완화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과	윤세명 과장 044-204-7740	전은별 사무관 star113@korea.kr
2-6	소상공인 스마트기기 보급 지원사업의 현장체감도 제고	중기부 디지털소상공인과	김민지 과장 044-204-7870	이진영 사무관 hebegins@korea.kr